

문화산책

이당금

예술이 백그라운드 대표



마로니에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어느새 다정한 친구처럼 순정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눈을 감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발랄한 발걸음, 버스킹의 선율이 어우러져 작은 오케스트라가 된다.

눈꺼풀 위로 번지는 햇살은 무대 위 조명처럼 환하다. 서울에서 공연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연습을 전후로 대학로를 찾는다. 대학로는 연극인들의 삶의 보금자리 같은 곳으로 여전히 활기차다. 아르코예술극장을 비롯해 수많은 소극장과 단체, 배우들의 에너지를 감각할 수 있는 곳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극장이 문을 닫았고,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로는 살아있는 문화예술 학습장이다. 예비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는 현장이다.

아르코극장 외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 -로베르 필라우. 나는 그 앞에서 묻는다. 나의 삶은 예술적인가? 나의 예

예술가가 성장하는 도시 광주 프로젝트

술은 삶을 예술적으로 만드는가?

그 질문은 곧 광주로 향한다.

광주의 일상과 예술은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문화중심 도시 광주, 아시아문화의 거점이자 민주와 인권의 기억을 품은 도시이면서도 오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일해야 할 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현실은 여전히 모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불구하고 연극영화과, 연기과 등 예술문화 관련 학과들이 통폐합되거나 다른 전공으로 대체되면서, 공연예술가를 꿈꾸는 예비 예술가들에게 광주는 어쩌면 점점 척박한 환경이 아닐까?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미래의 예술가를 키워낼 토양의 결과 속이 다른 건 아닐까?

광주가 진정으로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표방한다면, 화려한 기념사업이나 축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역 안에서 자라나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 전문 아카데미, 장기적인 창작 지원 체계와 기본소득 제도가 절실하다. 예술은 하루아침에 피어나는 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학습, 그리고 실패와 실험을 품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 속에서 자라난다.

광주는 국제적 네트워크 기반의 교류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 국제 비엔날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아시아문화거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있는 예술문화의 국제적 거점으로서의 충분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주요 도시들의 경우, 해외 거점 레지던시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

면서 예술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광주는 이러한 국제적 연계가 취약하다. 국제 교류 시스템을 제도화하지 않는 한, 지역 예술가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지원과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2023)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의 평균 연간 창작 소득은 약 1000만원 이하로, 생계와 창작의 병행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임을 자임한다면, 최소한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비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창작 아카데미 설립이다. 독일 베를린의 '아카데미 데어 쿤스트'처럼, 도시 차원에서 청년 예술가를 위한 교육·연습·실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청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도시일수록 예술 산업 고용률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유네스코 문화산업 보고서, 2022)고 했다.

예비 예술가가 꿈꾸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 국제적으로 교류하며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역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의 정책 기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광주는 비로소 '문화중심도시'라는 이름을 공허한 수식어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술하는 사람 다 광주로 모여라!!!

기고

한경숙

시인  
오윤물예연구소 연구원



문학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건물을 세워 전시와 행사를 치르는 데 있지 않다. 문학관이 지닌 진정한 가치는 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대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데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문학잡지다. 전국의 문학잡지만 차곡차곡 모아도 그것은 곧 하나의 거대한 아카이브가 된다. 잡지는 특정 시기의 문학적 감수성과 사회적 흐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관이 차별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문학잡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문학잡지를 발간하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 잡지는 몇몇 문인들의 열정과 헌신에 의지해 운영된다. 원고를 청탁하고, 편집과 교정을 거쳐 인쇄와 배포까지 직접 뛰어나니며 겨우 명맥을 이어간다. 현실적으로 구독 기반은 갈수록 약해지고, 인쇄비와 유통비는 큰 부담이 된다. 디지털 시대에 종이 잡지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지역 문학잡지는 문학관 아카이브의 핵심

역 문학인들은 잡지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역 문학의 기록이며, 후대에 전해야 할 문화적 유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문학잡지는 단순한 정기간행물이 아니다. 한 지역의 문학을 증언하고, 문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뿌리다. 지금 지역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한다면, 수십 년 뒤 우리는 지역 문학의 흐름을 되짚을 자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문학관은 '전국 문학잡지 아카이브'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잡지를 망라해 수집·정리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연구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문학을 만나는 또 다른 통로가 될 것이다. 만약 광주문학관이 이 일을 선도한다면, 다른 지역 문학관과 확실히 차별화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카이브 구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문학잡지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잡지를 만드는 문인들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원고료와 제작비, 배포망 구축은 개인의 희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작가들은 잡지가 더 성장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잡지가 곧 지역 문학의 얼굴이자,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민에게 문학을 소개하는 가장 친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 문학잡지 운영 목적에 맞춘 공격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

니라, 지역 문학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다.

문학관은 문학잡지를 단순한 수집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산실로 인식해야 한다. 잡지를 모으고 기록하는 일은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오늘의 잡지가 내일의 문학사를 만든다. 전국의 문학관이 제각각 흩어진 잡지를 수집해 체계화한다면, 지역 문학 연구의 깊이는 훨씬 더 풍부해질 것이다. 특히 광주문학관이 이러한 작업을 주도한다면, 광주만의 문학적 자산을 드러내는 동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정체성에도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행정과 문학계가 힘을 모아 문학잡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문학관이 주체가 되어 전국 문학잡지를 수집·보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창작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문학관이 살아 있는 문학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역 문학잡지를 지키고 키우는 일은 문학인만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곧 지역 문화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자, 후대에 건네줄 값진 유산을 다듬는 일이다. 전국의 문학잡지를 아카이브 화하고, 지역 문학잡지의 지속적 발간을 지원하는 길만이 문학관을 진정한 문화 거점으로 세울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취재수첩

골목형 상점가 사업 지속되어야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OO동·로 골목형 상점가 선정'. 최근 광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문구다. 동네 현수막 개점대에 하나씩은 꼭 걸려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인 현수막보다 많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자치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지난해 광주에 7개소에 불과했던 골목형 상점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특히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 지역 상인들이 적극 참여했다.

각 자치구도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답은 조래 개정, 주민설명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서구가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 6월30일 전국 최초로 18개 동 119개 골목형 상점가 100% 지정을 완료했다.

이후 북구(123개 상권)가 이달 4일에, 남구(82개 상권)가 6일 전상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념 선포식을 진행했다.

골목형 상점가 선정은 실제 매출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신청 인원이 속출, 동구와 광산구도 100% 달성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가문의 단비인 골목형 상점가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이제 막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관련 사업(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이 2026년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구조인 만큼 관련 사업이 종료될 경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과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의 담보다. 그저 단순 사업으로 끝날 경우 소상공인들이 느낄 절망감과 실망감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골목형 상점가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한다.

독자투고

진화하는 '지능범죄' 대책 마련해야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술·전문직 지식을 악용한 사기 등 지능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능범죄가 고도·정밀화되고,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신기술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 피해자는 '신용카드가 배송될 예정이다'는 전화를 받은 후 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곧바로 가짜 카드사 콜센터에 연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지능범죄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스템 활용 등 시스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능범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되면서 지능범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기 범죄가 더 증가하고 있다.

최신기술을 기반에 둔 범죄의 경우 처벌이 약한 탓에 더욱 활개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필요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재명 고용정책팀 대서파출소장

OPINION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사설

이재명 정부 100일...지역 현안 추진돼야

이재명 정부가 11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광주·전남 오랜 숙원사업들이 하나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핵심 현안들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관련 국비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새 정부가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광주는 인공지능(AI) 국가시범도시 조성, AIMO(AI+Mobility) 특화 도시 육성, 군공항 이전 및 광공항공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성화가 담겼다.

전남은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혁신, 여수 석유화학산단 친환경 전환과 애코산단 조성,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해 광주는 3조6616억원, 전남은 9조418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도 각각 3372억원(10.1%), 5260억원(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처럼 지역 현안들이 단순히 계획에 담긴 차원을 넘어 국정과제와 정부예산에 반영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안들은 여전히 표류하거나 무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을 미팅까지 주재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했던 군공항 이전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한 TF가 구성된 지 석달이 지났지만 공식회의 한번 열리지 않고 관련 뒷받침 무성하다.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도 전남도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개교 예상 시기를 2030년으로 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혁신도시에 유치하려 했던 기후에너지부도 신설되지 않고 환경부에 흡수돼 사실상 유기가 무산된 상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순항중이거나 제동이 걸린 현안들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전남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 절실하다

전남 해역에 지난 2022년 기준 연간 5만8173t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이 기간 전국 발생량 12만6035t의 46%가 넘는 수치다.

전남에 연근해 어업과 양식업이 발달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다른 지역이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때 따른 것이다.

전남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쓰레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남의 정책 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여기서 통상 해양 폐기물은 발생원인으로 육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육상 기인물과 어업·양식 등 해상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해상기인물로 구분한다.

해상수산부는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을 육상기인물 65%, 해상기인물 35%로 추정하고 있는데 전남은 당시 연간 유입량의 절반 이상인 55%가 해상기인물이었다고 한다. 이중 주로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폐 스티로폼 부표나 페어구 등이 32.4%나 차지했다.

이들 폐기물의 상당 수는 전용 분리배출 시설 및 공간 부족으로 수거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바닷속에 쌓여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남 해역 존재 쓰레기 8만9298t 중 72.1%가 바닷속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였고 이 중 62.5%가 양식장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들 폐기물이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를 넘어 해양 생태계 파괴, 더 나아가 어업 생산성 저하, 선박사고 증가 등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22년 전국 부유물 감집 사고 339건 중 33.9%인 115건이 전남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즉, 전남 해양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법과 연계된 광역자치체 차원의 관리 조례 정비, 지역 실정에 맞는 수거·선별·매각·보상까지 일원화된 '어민 참여형 수거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겐 건강할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니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Table with 3 columns: Contact info, Publisher (김상훈), Editor (최현수). Include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